

아시아 경제위기의 교훈과 동남아 경제의 장기과제

서동천*

- I. 서론
- II. 경제위기 원인에 관한 논쟁의 재평가
- III. 대외지향적 성장정책과 동아시아의 무역, 투자 패턴
- IV. 정부주도 성장정책과 제도개혁
- V. 위기관리의 교훈과 지역협력 문제
- VI. 결 론

I. 서론

아시아 경제위기는 이제 발발한지 2년이 경과되었고 이제 위기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받은 대부분의 경제가 초기의 패닉상태에서 벗어나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경제사상 초유의 대규모 경제위기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기본질서를 강타했고 특히 위기의 전면에 위치했던 동남아 국가들은 그 여진과 후유증으로 아직 기본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채 단기적인 수습책에 주력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제 동아시아 각국, 특히 위기에 직접적으로 영향받은 동남아 개도국들이 위기의 교훈을 성찰하면서 장기적 방향설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논의를 위한 몇 가지 구도

* 인하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 논문은 먼저 제2절에서 위기의 원인에 대한 간단한 성찰로부터 시작하는데 그간 논쟁의 초점을 요약하고 이를 비판한다. 제3절은 동남아 개도국이 그간 추진해 온 기본적 성장전략인 대외지향정책을 재검토하고 이러한 정책으로 동아시아 특유의 무역과 투자 체제를 형성하면서 금융위기의 전면에 노출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제4절은 정부주도의 성장 모델이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제도개혁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개혁의 문제점을 고찰한다. 제5절은 경제위기의 수습과정에서 역내국가들이 주도하지 못하고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미국이 주도하면서 위기가 심화된 과정을 검토하고 역내 경제협력의 문제점을 고찰한다. 제6절,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로부터 교훈을 종합하고 향후 방향설정을 위한 논의의 구도를 제시한다.

II. 경제위기 원인에 관한 논쟁의 재평가

동아의 경제위기가 발발한 초기부터 미국과 IMF에서 제시한 위기의 원인에 관한 대표적 진단은 동아시아 경제체제의 구조적 결함에 기인한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당시 미국의 재무장관 루빈(Rubin)은 정부와 은행, 그리고 기업의 유착관계가 불건전 여신에 의한 불건전 투자를 유발했음을 지적하고 있다.¹⁾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그린스팬(Greenspan) 의장도 이러한 체제가 투자의 과잉과 오판을 가져왔고 정책금융이 자원의 오용과 이윤을 무시한 확장, 손실과 상환불능을 가져왔다고 정부주도 자본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²⁾

1) 원문은 다음과 같다.

“While each of these enjoyed decades of strong growth and rising standards of living for their people, they also had deep seated common and individual problems. At the core, for all of them, close links between governments, banks and corporations led to fundamentally unsound investments by corporations funded by unsound lending by banks”(Rubin 1998).

2) 원문은 다음과 같다.

“Such a system inevitably has lead to the investment excesses and errors. Such systems can produce vigorous growth for a time when the gap between endogenous applied

정책당국의 이러한 시각은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설로 이론적 뒷받침을 받게된다. 즉 크루그만(Krugman)은 아시아의 기업풍토는 정경유착, 부패, 친인척 관계와 같은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이고 이런 풍토에서 만연된 금융부문의 도덕적 해이가 경제위기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Krugman 1998a).³⁾

한편 이러한 시각에 반대하는 대표적 시각은 레이드렐(Radelet)과 삭스(Sachs) 등이 제기한 금융공황 가설이다. 이들은 경제위기의 성격을 자기실현적 금융공황이라고 규정하고 동아시아의 고속 성장기에 거대한 해외자본이 유입됨으로서 금융공황에 취약한 구조로 노출되었다고 주장한다(Radelet and Sachs 1998). 바그와티(Bhagwati)도 이와 유사한 시각에서 자본이동의 자유화로 민간부문에 대한 통제가 급격히 완화되면서 급격하게 불어난 해외 단기 자금의 차입이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Bhagwati 1998).

이러한 상반된 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단은 위기수습에 관하여도 크게 상반되는 처방을 내리게 된다. 즉 도덕적 해이 가설의 시각에서는 구조적 개혁과 불건전 기업과 은행의 정리를 통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주장하고 재정긴축 정책과 고금리 정책을 병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금융공황 가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기의 구조개혁은 오히려 시장의 패닉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하고 거시경제적 기초는 건실하므로 저금리, 재정확대 정책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시각은 어느 것이나 금융적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동아시아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서구적 해석으로서 위기의 원인이나 빠른 전과, 그리고 예상을 초월한 실물경제의 악화 등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서 발발하였고 금융부문의 문제점이 직접적 원인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으나 금융위기는 일시적으로 경과하는 것이고 경제의 기초가 건실하다 할지라도 발

technologies and the world standard is large but as the gap narrows, the ability of these systems to handle their increasingly sophisticated economies decline markedly. Policy loans foster misuse of resources, unprofitable expansions, losses, and eventually defaults” (Greenspan 1997).

3) Krugman은 후일 이러한 시각을 시정하고 금융 패닉에 기인함을 인정하고 있다 (Krugman 1999).

생활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적 현상보다는 실물경제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성찰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먼저 동아시아 개도국의 성장모형과 그것이 결과한 무역과 투자의 지역적 특수성이 위기와 관련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I. 대외지향적 성장정책과 동아시아의 무역, 투자 패변

1980년대 중반 이후 동남아의 개도국과 중국은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동아시아의 무역과 투자 구조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⁴⁾ 이러한 성장전략은 1990년대 중반까지 놀라운 무역과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성공적인 모델로 인식되었으나 경제위기를 계기로 구조적 취약점을 노출함으로써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1. 동아시아의 무역체제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은 수출주도의 성장전략을 중심 축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동남아 개도국은 1980년대 초에 1차상품 가격이 폭락하자 원자재 수출위주의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노동집약 산업의 육성을 통한 공업화를 급속히 추진하였고 중국 역시 개방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략은 일본과 역내의 신흥 개도국들이 엔화의 가치상승과 임금상승으로 노동집약 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이를 주변국으로 이전하려는 산업구조 조정 정책과 맞물려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동남아 개도국과 중국은 노동집약재의 생산과 수출기지로서 자리잡고 일본과 신흥 개도국들은 이들에 대한 자본재와 중간재 수출이 증가하는 분업구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최종 소비재의 수출은 일본과 신흥 개도국이 수입증가의 한계를 보였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3각 무역체제가 형성되게 되었다.

4)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국가는 주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였고 1990년대에 필리핀이 뒤늦게 합류하게 되었다.

<표 1>은 동아시아의 주요 그룹별 수출비중의 변화를 살펴 본 것인데 일본과 신흥공업국의 동남아 수출비중이 급증하고 동남아 개도국의 대 선진국 무역비중이 높아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러한 역내 생산체제의 구축과 부품무역의 증가에 힘입어 역내무역의 비중이 높아지고 역내 국가간 무역의 상호의존 체제가 형성되었다. <표 2>는 아세안 국가들의 수출구조에서 급격하게 공산품 비중이 높아지고 무역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개방경제화한 것은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체제는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즉 무역의 성장이 역내에서 순환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최종수요를 역외시장에 의존하였다는 점이다. 이 순환의 한 고리를 차지한 미국 등 선진국의 시장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동아시아의 수출을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무역성장은 1996년부터 격감 추세를 보였다. 또한 동아시아의 수출주종으로 자리잡은 반도체 등 전자산업의 경기 순환적 요인에 의한 수요감퇴가 이러한 구조적 요인과 겹쳐 1996년 동아시아의 수출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제히 격감하였다.

<표 1> 동아 그룹별 수출 비중의 변화: 1988~94 (단위: 퍼센트)

	일본	NIEs	ASEAN4+ 중국	미국	동아시아
일본	-	24(19)	15(8)	30(34)	39(27)
NIEs	9(13)	14(11)	27(15)	22(31)	50(39)
ASEAN4 + 중국	18(21)	29(29)	5(4)	20(14)	52(54)
미국	10(12)	12(11)	5(3)	-	27(26)

주: 1) NIEs는 4개 신흥개도국(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이고 ASEAN 4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임.

2) 괄호 안은 1988년 수치임.

자료: 서동찬(1997)에서 인용.

결국 역내 개도국들이 동시에 추진한 수출 드라이브는 기술적 한계 때문에 일부 노동집약산업에 편중된 성장을 초래했고 수요의 한계에 직면해 고

역조건의 악화와 수출성장률의 감퇴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동남아 개도국은 이러한 취약구조의 전면에 위치함으로써 수출감퇴가 금융위기로 확대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⁵⁾

〈표 2〉 공산품 수출 및 무역의존도 (단위: 퍼센트)

	공산품 수출비중		무역의존도	
	1980	1996	1980	1996
인도네시아	2	51	54	51
말레이시아	19	76	113	183
태국	25	73	54	83
필리핀	21	84	52	94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8/9

〈표 3〉 수출 성장률 (단위: 퍼센트)

	1990~1995	1995	1996
한국	13.4	30.3	3.7
인도네시아	10.8	13.4	9.7
말레이시아	14.4	26.3	5.8
태국	14.2	25.1	-1.3
필리핀	9.4	29.3	18.3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각호.

2. 자본이동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의 또 다른 축은 외자도입이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비교적 높은 저축률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높은 투자수요에 충족하기 위하여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하였다. 특히 아세안 4개국의 경우 이러한 정책

- 5) 아시아 경제위기의 진원지인 태국에서 투자자들의 기대심리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바트(baht)화에 대한 투기적 공세를 촉발한 것은 노동집약재의 급격한 수출감소였다고 워(Warr)는 지적하고 있다. 즉 1996년에 의류는 -22퍼센트, 신발류는 -41퍼센트, 그리고 섬유류는 -4 퍼센트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Warr 1998, 55).

은 1980년대 후반부터 상승한 일본과 신흥개도국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해외 직접투자의 급증을 가져와 1980년대 후반에 연평균 40퍼센트의 경이적인 속도로 증가하였고 1990년대 전반에는 중국이 주된 투자의 수입국으로 등장함에 따라 연평균 16퍼센트로 증가세가 완화되었다. 초기의 해외투자는 주로 수출산업 부문에 특화 된 자본으로서 하청이나 조립과 같이 역내 선진국이 역내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때문에 수출산업이 급 성장하였으나 이러한 해외투자의 입지결정은 비교우위보다 절대우위에 입각해 결정되기 때문에 투자 수입국의 자원부존도에 비추어 볼 때 자원배분을 왜곡한 측면도 없지 않다. 예를 들면, 태국의 경우 기계, 수송기기의 수출비중은 1985년 9퍼센트에서 1994년 34퍼센트로 급증하였으나 이는 태국의 요소부존도에 비추어 왜곡된 자원배분으로서 1990년대 중반부터 숙련노동과 기반시설의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등, 경제효율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한편 증권투자와 은행간 차입형태의 기타 자본이동은 이러한 1990년대 자본이동의 점진적 자유화 조치와 선진국 기관 투자자들의 신흥시장 투자 붐과 함께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표 4>는 이러한 자본이동의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즉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은 1980년대 후반에 급증한 이후 1990년대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증권투자는 1993년부터, 그리고 주로 은행간 차입인 기타자본의 유입은 1995년부터 시차를 두고 증가하였다. 이는 불균형적 성장패턴에도 기인하는데 무역부문에 편향된 해외직접투자의 유입과 정부의 자원배분은 결국 시장에서 비교역재의 수요초과를 일으켜 가격상승을 유발하고 자본이동이 자유화되면서 고 수익을 목표로 하는 해외 금융자본이 부동산과 같은 비교역재 부문에 유입된 것이다.⁶⁾

그러나 해외직접투자와는 달리 이러한 간접투자는 단기적이고 변동폭이 크다. 1996년도 간접투자의 유입액은 609억 달러였으나 위기가 일어난 1997년에는 205억 달러의 순 유출을 기록함으로써 1년간 814억 달러의 변동폭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이들의 GDP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규모로 금융위기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규모였다.

6)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서 직접투자의 유입 붐에 이어 간접투자와 은행차입의 형태로 해외 금융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 등 비교역재 부문에 유입된 과정은 벨로(Bello 1998) 참조.

〈표 4〉 5개국의 민간자본이동 (단위: 억 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해외직접투자	62	72	86	86	74	95	120	96
증권투자	13	33	63	179	106	144	203	118
기타투자	174	185	154	61	171	390	406	-32 3
민간자본이동 계	249	290	303	326	351	629	729	-11 0

주: 5개국은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임.

자료: IMF (1998, 13).

3. 환율정책과 실질환율

동아시아 환율체제는 대부분 달러화에 연동된 체제로서 외자의 유치와 물가안정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환율정책의 이러한 경직성은 환율의 고 평가를 가져왔고 오히려 환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결국 외환시장에서 혼란과 위기를 촉발하였다.

이러한 환율정책이 교역재에 편향된 경제성장과 자본유입으로 실질환율의 평가절상(real appreciation)에 이르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수출산업 육성의 산업정책과 수출부문에 특화된 외자(해외직접투자)의 도입은 무역편향적 경제성장을 결과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만약 상대가격이 불변이라면 교역재의 과잉생산과 비교역재의 수요초과를 일으킨다. 따라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비교역재의 가격이 상승하는데 교역재와 비교역재의 가격은 곧 실질환율이므로 실질환율의 평가절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원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교역재 부문으로 정책자금을 배정한다면 이러한 왜곡은 비교역재 부문에서 높은 자금수요를 유발하고 결국 외국자본이 수익성이 높은 이 부문으로 유입된다. 직접투자의 경우 유치부문을 특정할 수 있으나 간접투자의 경우 부문 특정성이 없으므로 결국 비교역재 부문에서 붐 내지 거품현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에 겹쳐 일어난 1994년의 위안화 평가절하와 1995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엔화의 하락으로 경제위기가 발발하기 전, 명목환율은 고 평

가되었고 이것이 수출경쟁력의 하락과 환율에 대한 시장에서의 불신을 초래하면서 경제위기가 촉발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4.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의 재평가

지금까지 우리는 동남아 개도국이 추구한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의 취약구조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취약구조는 위기의 원인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위기로부터의 회복도 어렵게 하고 있다. 즉 국제수지 불안을 해소하면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첩경은 수출증대인데 동아시아 각국은 무역의 상호의존으로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기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국가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도 무역이 함께 감소하는 경기순환의 동시성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더욱이 동아시아 경제의 주축인 일본은 이러한 경기순환적 요인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침체 상태에 있어 동아시아의 경기회복을 주도하기보다 동남아 개도국의 경기회복에 오히려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것은 멕시코가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확대로 경제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지금까지 추구해온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의 결과 이러한 취약성이 들어났다면 이제 이러한 정책을 수정하는 문제와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당연히 제기된다. 그러나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은 위기의 발발 전까지 동아시아의 빠른 성장을 가져왔고 전형적인 대안인 내향적 성장은 이미 여러 개도국의 실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오고 제도적 후진성을 고착화시켜 성장을 이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정책의 전환은 적절하지 못하다. 더욱이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들은 그 조건에 의해 대외적인 개방과 시장경제로 개혁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므로 현실성도 없다. 따라서 이들은 수출주도, 외자도입, 등에 의한 성장모델로 다시 회귀하고 있지만 이러한 접근이 과거와 같은 활력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금융위기에 취약한 구조라는데 성장정책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표 5〉 1998년 동아시아 상품무역의 격감추이
(1997년 대비 달러기준 무역액 감소율)

	수출	수입
한국	-2	-35
태국	-7	-33
인도네시아	-9	-34
말레이시아	-7	-26
필리핀	17	-17
홍콩	-12	-31
싱가포르	-12	-31
대만	-9	-9
중국	1	-2
일본	-8	-17

주: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재 무역은 제외함.

자료: World Trade Organization (1999).

IV. 정부주도 성장정책과 제도개혁

동아시아 모델의 또 다른 특징은 정부주도의 성장정책이다. 홍콩을 제외하면 동아시아 개도국은 정부가 자원의 동원과 배분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성장속도를 높이는 정책을 추구해 왔다. 이러한 모델은 전후 경제성장에 성공한 일본의 모형을 모방한 것으로 집단중심의 아시아적 가치관과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의 산물이기도 했다. 이러한 모델에서 정부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산업정책을 통해 수출산업이나 중화학 공업 등 전략산업을 육성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정책은 자본의 동원과 배분을 위해 금융산업을 통제하고 정부, 금융기관, 기업 간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발발하면서 이러한 성장모형은 서구의 정책당국과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되었고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지탄받았다. 정부의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했으며 정부, 금융기관, 기업간의 유대는 정실 자본주의로서 비효율적인 자본배분과 과잉, 무모한 투자를 유발했다는 비판이었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모델이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비판의 배경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정부와 기업의 아시아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과 불만이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초부터 신 상호주의(new reciprocity) 원칙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시장개방 정책을 다자간, 또는 양국간 협상을 통해 추진해 왔고 이들 역시 개방정책을 추구하면서 무역과 투자의 공식적인 장벽은 상당부분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비공식 장벽이 실질적 장벽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1990년대 동아시아에 대한 경제 협상의 초점은 이러한 비공식 장벽의 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1990년대 무역협상의 주요 안건에 문화와 제도, 상 관습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정무역의 범주에 포함시켜 국내규제, 정부와 기업의 지배구조의 투명성, 부패와 같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었다(Feketekuty 1998, 7-8). 이러한 변화는 미국이 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의 주종이 서비스산업과 대형 기간산업과 같이 이러한 장벽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스톱스(Stokes)가 지적한 대로 냉전 후 시대에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체제적 부패를 더 이상 용인할 필요가 없어졌고 민주적 체제가 미국 기업이 활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체제라는 확신에 기인한다(Stokes 1998, 168-9).

미국의 이러한 불만은 다국적 기업의 해외투자 활동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 해외투자는 대부분 활동이 현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더불어 규제의 완화와 시장경쟁성(market contestability)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간섭과 불투명한 행정, 그리고 정실과 부패가 온존하는 동아시아 시장에서 미국기업은 일본이나 화인 기업에 비해 불리한 경쟁조건에 직면하고 있다고 느껴왔다. 따라서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경제자문회의의 Frankel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아시아 시장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로 인식되었다.⁷⁾

이러한 시각은 IMF의 프로그램에 그대로 반영되어 구조조정과 제도적

7)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most important source of moral hazard is between the Asian governments and their financial institutions and large corporations. Thus we are doing the right thing in pushing them to increase transparency and supervision, improve governance, open their financial markets, and loosen banking relationships (directed lending and connected lending). It is a historic opportunity to get them to undertake important structural reforms they would not otherwise have done”(Frankel, 1998).

개혁이 구제금융의 핵심 조건으로 등장하였다. IMF의 캄드쉬(Camdessus) 총재도 밝혔듯이 동아시아에 대한 구제금융의 조건은 과거와는 달리, 거시경제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긴축정책이 핵심이 아니라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⁸⁾

물론 이러한 접근에 대하여 미국 내에서도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Feldstein은 한국의 경우 IMF가 부과한 구조조정 조건은 한국경제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라며 점진적인 추진을 주장하고 IMF는 미국과 일본이 그들의 무역과 투자협상 안전을 IMF 조건으로 부과하려는 시도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⁹⁾

어쨌든 이러한 배경 하에서 IMF는 한국의 경우 재벌해체, 태국의 금융회사의 정리,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친인척의 독점기업 해체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급격한 개혁안이 부과하였고 미국은 여러 채널을 통해 그 이행을 촉구하였다. 한국과 태국의 경우 이러한 개혁안에 따랐으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를 거부하다가 IMF 자금의 집행이 정지되었고 결국 수하르토 정권이 붕괴하는 정치적 변화까지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외부적 압력이 아니더라도 동아시아 국가에서 제도적 후진성은 경제발전 속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극복되어야 할 과제였다. 더욱이 성장과정에서 비대해진 거대기업들은 이제 정부의 배후에서 정책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감독이 어려워졌고 그 때

8)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se programs represent a marked departure from the kind of programs we have traditionally supported in the past. I say this because the centerpiece of each program is not a set of austerity measures to restore macroeconomic imbalance, but a set of forceful, far reaching structural reforms to strengthen financial systems, increase transparency, open markets and, in so doing, restore market confidence”(Camdessus, 1998).

9) 원문은 다음과 같다.

“Even if it were desirable for Korea to shift labor, goods, and capital markets more like that of the U.S., it may be best to evolve in that direction more gradually and with fewer shocks to existing businesses. Unless the reforms could only be done under the duress of an IMF program or are specifically needed to end the liquidity problem, making the transition in the midst of a currency crisis could be a poor timing”(Feldstein 1998, 28-9).

문에 금융위기를 촉발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이들 국가들이 유지해온 경제의 기본 틀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 틀과 의식의 개혁까지 포함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제도적 개혁과 경제적 변화에 관하여 노스(North)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즉 경제적 현실이 변화하면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도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기초를 두고 법과 관습과 같은 제도가 변화하게 되고 새로운 제도에 따라 경제정책도 변화하는 것이다(North 1998).

그러나 경제위기를 당한 국가의 제도개혁은 이러한 정상적인 변화와는 달리 역의 수순을 밟게 된다. 즉 동아시아의 현실은 경제위기를 전후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급격한 구조조정과 개혁안이 IMF 조건에 따라 부과되었고 각국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도개혁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법의 개정과 같은 제도개혁 조치는 하루아침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정책들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제도개혁은 대부분 미국식 제도의 수용인데 이러한 제도의 기본이 되는 사회적 인식과 개인의 가치관에는 미국과 동아시아간에 현격한 격차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나 개인의 의식체계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단기간에 충격적으로 변화하기 어렵다. 현실이 변화했음을 인식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시간적 지체 현상 때문에 집행되는 정책과 사회적 인식 사이에 불합치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의 정책집행은 실효성이 없고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기 쉽다. 이러한 갈등은 정실주의와 부패가 체제적으로 확산된 사회일수록 지대와 같은 이윤추구의 기회가 크기 때문에 기존 이익집단에 의한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악화되면 경제의 불안정뿐만 아니라 정치적 불안정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개혁의 추진에 있어 시간적 구도도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위기심리가 고조된 상황에서는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기존의 수혜집단은 물론이고 다른 어느 집단도 일정한 희생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의 추진은 용이하다. 그러나 개혁이 지체하면서 경제가 회복기에 들면 제도개혁의 당위성은 약화되고 개혁의 추진은 더욱 어렵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동아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혁은 딜레마에 빠져있다. 즉, 제도적 후진성과 체제적 부패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로 서구

식 제도의 광범위한 채택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서구식 제도는 아시아적 의식구조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식구조의 개혁까지 병행되는 개혁이어야 새로운 제도나 정책이 실효성이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개혁은 단기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급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할수록 개혁의 실효성은 의문시된다. 그 반면에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개혁은 경제가 회복되어 위기심리가 사라지면 개혁의 당위성은 약화되고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게됨에 따라 제도개혁이 어려워진다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V. 위기관리의 교훈과 지역협력 문제

동아시아 최초의 대규모 경제위기는 그 지역적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수습과정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거의 전적으로 IMF와 미국이 위기관리를 주도했다. 더욱이 동아시아 지역은 오래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축률을 유지해 왔고 세계 최대의 채권국인 일본을 비롯해 방대한 준비금을 보유한 중국과 대만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유동성위기로 전 지역이 타격을 받았다는 것은 일종의 아이러니라고 하겠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문제에 관하여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정책의 배경과 기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위기가 발발했을 때 미국의 단기자금의 빠른 철수를 시작했고 미국은행의 노출도는 일본이나 유럽의 은행들에 비해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위기의 수습을 미국과 미국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IMF가 주도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나타냈다. 예를 들면 섬머스(Summers) 당시 재무차관은 1997년 11월 하원의 금융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3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위기의 책임은 해당국과 투자자에 있다. 따라서 외부의 지원이 필요할지라도 위기의 수습과 예방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해당국이 진다. 둘째, 국제적 대응의 중심은 IMF이다. IMF는 금융과 관련하여 강력한 개혁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므로 미국은 IMF에 의한 수습을 지지한다. 셋째, 국제금융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역내협력은 환영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IMF에 종속적이어야 한다(U.S. House of Representatives 1997, 37-8).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서 미국은 동아시아 위기수습에 대해 IMF로 창구를 일원화 할 것을 요구하면서 역내국가간 지원에 관하여 부정적이었다. 역내의 자구적 노력의 대표적 사례는 1997년 9월 일본이 제안한 아시아 통화기금(Asian Monetary Fund)의 구상이었다. 이 제안은 일본이 500억 달러,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이 500억 달러를 출연하여 금융위기국의 환율방어와 국제수지 안정, 무역신용 등에 사용하자는 구상이었다. 이는 당시 금융위기가 확산되면 아시아에 노출도가 심한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일차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한 긴급조치의 성격이었지 후일 논쟁의 초점이 된 아시아의 블록화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당시 이 제안은 아세안 국가들의 호응을 받았으나 미국과 IMF의 강력한 반대로 폐기되었다. 이들이 제시한 표면적인 반대이유는 IMF는 구제금융과 함께 강력한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채무국의 경제운동을 관리할 수 있지만 다른 구제금융은 또 다른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든 아시아인만의 지역협력은 반대한다는 미국의 일관된 아시아 정책기조에 따른 것이었다.¹⁰⁾

이것이 오래된 미국의 일관된 정책기조라는 것은 미국의 대 아시아정책을 주도해온 버그스텐(Bergsten)의 진술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APEC)의 형성초기에 말레이시아가 제안한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East Asian Economic Caucus(EAEC)에 대한 구상 때부터 당시 국무장관 베이커(Baker)가 “태평양을 양분하여 미국과 동아시아를 분리하려는 기도에 반대한다”는 정책을 분명히 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¹¹⁾

10) 당시 미 재무장관 루빈(Rubin)은 일본이 미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은데 격노했다고 New York Times는 보도하고 있다. 이 구상은 사실 미국에 전혀 자금부담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루빈은 이 제안이 미국의 국익과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일본이 개혁과 관련된 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지원할 것을 우려하였다(Kristof 1999).

11) 버그스텐(Bergsten)은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관련된 1997년 미국하원 금융분과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A central thrust of American foreign policy, including foreign economic policy, has

동아시아의 정부간 또는 제도적 지역협력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반대뿐만 아니라 역내에서 국제 공공재의 창출을 주도할 지도력의 부재 또한 걸림돌이다.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고 아시아에 깊은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지도력의 행사가 기대된다. 그러나 일본은 전후 오래 동안 탈아입구(脫亞入歐) 정책을 추구해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아시아정책을 강화했다고 해도 미국의 구도에 편승하는 입장이지 독자적인 외교정책은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역내에서도 역사적 불신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어 강력한 외교적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역시 경제역량의 한계, 역사적 불신, 체제의 상이 등으로 역내협력을 주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본-중국 간 관계도 협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역내에서의 협력 레짐의 형성은 지도력 부재라는 심각한 애로에 걸려 있다.¹²⁾

동아시아만의 협력이 이런 애로에 봉착해 있다면 아시아-태평양 협력 개념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1980년대 이래 동아시아 경제의 활력으로 무역과 투자의 링크가 높아지면서 시장에 의한 기능적 통합이 상당히 진전되었다. 이러한 기능적 통합이 선도하여 탄생한 APEC은 아시아-태평양 경제의 제도적 협의체로 1989년 출범한 이래 10여 년간 외형적 확장을 이루어 왔다. APEC은 1993년 정상급 협의체로 격상되었고 1994년 보고르(Bogor) 회의에서 역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계획이 합의되어 아시아-태평양 경제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협의체로서 위상을 높였다.

그러나 APEC 대한 기대나 신뢰는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크게 실추하였다. 즉 위기가 확산되던 1997년 말 방쿠버(Vancouver) 회의에서 위기에 대한 실질적 지원문제는 논의되지 못 하였고 금융시장 개방과 15개 부문 조기개방 등 미국의 관심사만이 주로 논의되었다. 1998년 동남아 각국이 심각한 경기후퇴로 사회적 위기까지 겪고 있던 시기에 열린 쿠알라 룸포르

been to avoid any institutional devices that - to use the words of the Secretary of the State James Baker - 'would draw a line down the middle of the Pacific and threaten to divide East Asia and North America'. The U.S. has thus firmly, and successfully rejected Malaysian and other proposals for the EAEC or any other 'Asian only' devices"(Bergsten 1997).

- 12) 일본은 지역적 협력을 주도하지 못하는 대신 양국간 협력으로 이를 보상하고 있다. 1998년 일본의 재무장관 미야자와가 제안한 Miyazawa Plan은 경제위기를 당한 국가에 대한 양국간 원조로서 미국은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

(Kuala Lumpur) 회의에서는 클린턴(Clinton)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고아(Gore) 부통령은 주최국의 민주화와 인권문제를 제기해 갈등을 빚었다. 1999년 오클랜드(Auckland) 회의 역시 주제이었어야 할 경제문제보다 부제인 동티모르 문제가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아펙은 그 역할이 가장 긴요한 시기에 전혀 무력했음을 보여줌으로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개념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APEC의 위상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역시 APEC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서 APEC의 효용이 어떻게 변화해왔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APEC에 대한 관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 하나는 1980년대 말부터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지역협력이 강화되면서 세계경제의 블록화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견제하면서 아시아의 블록화를 예방하는 수단으로 APEC을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동아시아 시장의 중요성과 시장개방의 필요에서 APEC을 양자간 협상 또는 다자간 협상에 보완적인 지역적 협상의 채널로 활용하자는 것이었다.¹³⁾

그러나 이러한 효용성은 동아시아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크게 감소하였다. 즉 경제위기로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가 활력을 상실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지역화로 세계경제가 3분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필요 없게 되었다. 그리고 위기관리를 통하여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도 크게 강화되었으므로 지역적 협상보다 양국간 협상 방식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다시 높아져 APEC의 효용성은 크게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동아시아의 입장에서 협력이 가장 절실했던 시기에 APEC의 무력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APEC에 대한 기대는 태평양의 양안에서 다 같이 퇴조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역협력과 관련하여도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들은 지역협력의 부재 때문에 경쟁적 수출확대, 경쟁적 통화의 평가절하를 막지 못하고 위기를 확대시켰으며 역내의 유동성도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IMF와 미국이 주도한 위기관리가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충실한 처방이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 적절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없었다. 이들은 이러한 역외국가에 의한 위기관리를 통하여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금융, 통화문제를 비롯해 역내

13) 이러한 해석에 관하여 Suh(1995, 157-8) 참조.

의 자주적인 경제협력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으나 이를 반대하는 미국의 영향력은 오히려 강화되었으므로 그 실현성은 더욱 희박해 졌다.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의 경우, 다양한 회원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실질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고, 미국의 이해관계가 우선하게 되어 지역협력의 실익이 없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VI.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장기적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경제위기가 남긴 교훈과 동아시아가 처해 있는 딜레마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딜레마로부터 탈출에는 간단한 해법이나 대안이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 얻은 교훈을 망각하고 다시 위기에 취약한 성장정책으로 회귀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공업화 과정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구도에서 장기적 과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먼저 대외지향적 성장의 취약구조를 지적하였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이러한 성장은 외부의 가격변화에 따라 자원이 산업간 이동될 수 있는 정태적인 자원분배의 변화라기보다 비 가역적인 산업구조의 외연적 고착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산업정책이나 무역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기의 발발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위기가 준 교훈이다. 바그와티(Bhagwati)가 자본자유화의 위협에 관하여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위기가 발생하면 정부는 채무상환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뿐만 아니라 IMF의 관리하에 들어가면 정책선택의 자유마저 상실하므로 그 손실은 엄청나다. 따라서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은 이에 따른 경제효율의 증가라는 편익과 위기발생에 따른 손실과 그 가능성을 산정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Bhagwati 1998). 또한 이 고찰에서 드러났듯이 무역부문에 편향된 자원배분은 결국 이를 교정하려는 시장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무역부문과 비 교역재 부문, 그리고 제조업 부문과 금융 등 서비스부문의 균형적 성장은 위기발발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성장률이 다소 둔

화되더라도 추진되어야 할 과제다.

현재의 국제금융체제에서 거대한 단기성 투기자본의 횡포에 관해 국제적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간에 합의가 도출되어 이를 체제적으로 시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관련하여 얻은 또 하나의 교훈은 국제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소국으로서 단기, 투기성 자본의 이동에 관하여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기 자본이동에 관한 제약은 칠레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이번 위기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시도했다. 그 결과 당초에 우려했듯이 파국을 초래하지도 않았고 국제사회도 이에 대해 그 필요성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¹⁴⁾

다음, 제도개혁에 관하여 그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적지 않은 혼란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논점으로 압축된다. 첫째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냐는 문제와 둘째는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문제다.

첫째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미국과 IMF는 아시아적 가치와 아시아적 특수성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부정하고 미국식 제도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또 이러한 요구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미국식 제도의 도입에 대해 회의하는 입장에서도 “아시아는 다르다” 라는 단순한 주장 외에 논리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제도도 순차적으로 발전한다는 단순한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서구식 제도도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자리잡은 후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것이며 아시아적 제도와 관행도 오랜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지닌 것이다.

서구적 시각, 특히 미국에서 이러한 논쟁의 출발점은 불투명하고 정실에 따른 행정과 기업의 구조에 대한 불만에서 이를 후진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 발단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이념적, 문화적 차이로 확대시켜 아시아적 가치관과 서구적 가치관, 정부주도의 개발경제 이념과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이념을 대립적으로 해석하고 그들이 우월성을 확신하고 있는 미국식 체제를

14) 크루그만(Krugman)은 일시적 수단으로서 자본에 대한 통제를 제안했다(Krugman 1998b). 세계은행도 1999년 World Development Report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IMF에서도 말레이시아의 실험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World Bank 1999, 73-5).

부과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도적 개혁의 범주가 위기수습에 필요한 개혁의 범위를 넘는 엄청난 과제로 확대된 것이다.¹⁵⁾

그러나 위기를 초래한 것은 정부의 실패라기보다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시장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이념의 전환이 아니라 정책의 전환인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무의미하고 생산적이지도 못한 경제와 사회체제의 이념 논쟁에 휘말려 가치관의 변화라는 엄청난 과제까지 수반되는 제도적 개혁을 하지 말고 투명성과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분적 개혁을 진행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해답도 자명해 진다. 즉 기본적 가치관과 문화적 배경과 관계 없이 효율과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은 급진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협력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시장의 기능적 통합이 선행하면서 역내 국가간 상호의존이 높아진 반면 정부간, 제도적 통합이 이에 수반되어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 지역에 확산된 위기와 심각한 경기후퇴를 방지하지 못 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동아시아만의 지역 협력이나 아시아-태평양간의 협력 가능성을 각기 살펴보았으나 현 단계에서 어느 방향으로나 실질적인 제도적 협력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결과 그 동안 동아시아 시장에서 진행된 지역화 경향은 일단 반전할 것이 예상된다. 즉 무역의 경우, 역내무역의 침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다시 높이고 역내무역 비중은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이미 강조한 바와 같이, 이번 위기관리의 초점은 동아시아의 기업환경을 선진국 기업들이 진출하기에 적합한 기업환경으로 변화시키는데 있었

15) 문명의 충돌 가설로 유명한 헌팅턴(Huntington)은 미국 대외정책의 문화적, 이념적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American officials quite naturally tend to act as if the world were unipolar. They boast of American power and American virtue, hailing the U.S. as benevolent hegemon. They lecture other countries on the universal validity of American principles, practices, and institutions...Thus, the U.S. has pressured other countries to adopt American values; promoted American corporate interests under the slogan of free trade and open markets; shape World Bank and IMF policies to serve those corporate interests; and bludgeon other countries to adopt economic policies and social policies that will benefit American economic interests”(Huntington 1999, 37-8).

다. 동아시아에 대한 서구 기업의 진출은 위기로 인해 폭락한 기업의 자산 가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확실성 때문에 예상보다 저조했다. 그러나 위기가 안정되는 국면부터 서구기업의 활발한 투자가 예상되어 해외투자 측면에서도 일본과 화인 기업이 주도하던 지역화 추세는 반전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동아시아 경제가 얼마나 빠른 회복을 보이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일단 동아시아 시장에서의 지역화추세는 반전되어 세계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국제 통화, 금융 부문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국제적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적인 예방과 방어 수단에 관한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이러한 방향으로 시도로서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1997년 합의한 “Manila Framework”이 있다. 이 제안은 역내 국가간 상호감시를 통해 금융 불안에 대처하자는 것이었다. 이 “Framework”은 “아세안 플러스” 형태로 운영되면서 미국과 아시아 개발은행을 참여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시아인만의 협력으로 오해받을 우려는 없다. 그리하여 아세안은 1998년 10월 “ASEAN Surveillance System”을 정식 발족하여 금융 통화 부문의 감시와 자료 교환을 하고 있다. 또한 1998년 12월에 발표된 “Hanoi Plan of Action”에서는 아세안통화의 역내 사용확대와 공동 통화, 환율체제에 관한 연구 등 통화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일본, 중국, 한국 등 대화 상대국과도 금융, 통화 부문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의 이러한 협력이 성공한다 해도 동북아와 동남아간의 긴밀한 경제적 링크, 아세안의 경제규모와 교섭력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아세안이 주도하는 협력이 동아시아 경제의 지역적 안정에 기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이 현실적 제약요인이 되어 있고 동북아의 경제협력은 이를 조성할 정치적 조건이 미숙하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소집단 협력이나 양국간 협력 외에 별다른 대안은 없는 것 같다. 또한 현 단계에서는 공식적이고 포괄적인 제도적 협력체를 추진하는 것보다 이해관계가 동질적인 부문별로 협력관계를 강화해가면서 장기적으로 정부간 협력의 기반이 되는 사회, 문화적 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상호간 이해의 증진과 신뢰의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더 긴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서동천. 1997. “동아시아 비교우위의 이동과 무역패턴의 변화: 1985~1994.” 『인하대학교 산업경제 연구소 논문집』, 제11집 제1호, 77-100.
- Bello, W. 1998. “Addicted to Capital: The Ten-Year High and Present-Day Withdrawal Trauma of Southeast Asia’s Economies.” *Focus on the Global South*, Chulalongkorn University, Bangkok. Internet Version (http://www.focusweb.org/focus/library/addicted_to_capital.htm).
- Bergsten, C.F. 1997. “The Asian Monetary Crisis: Proposed Remedies.” Statement before the Committee on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November 13, <http://www.iie.com/crisis.htm>.
- Bhagwati, J. 1998. “The Capital Myth: The Difference between Trade in Widgets and Dollars.” *Foreign Affairs*, May/June, 7-12.
- Camdessus, M. 1998. “The IMF and Its Program in Asia.” Speech a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ttp://www.imf.org/external/np/speeches/1998/012198.html>.
- Feketekuty, G. 1998. “An American Trade Strategy for the 21th Century.” *Trade Strategy for a New Era: Ensuring U.S. Leadership in a Global Economy*.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New York.
- Feldstein, M. 1998. “Refocusing the IMF.” *Foreign Affairs*, March/April, 20-33.
- Frankel, J.A. 1998. “The Asian Model, the Miracle, the Crisis and the Fund.” Speech at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April 6.
- Greenspan, A. 1997. Speech at the Economic Club of New York, December 2. <http://www.bog.frb.fed.us/boarddocs/speeches/1997/19971209.html>.
- Huntington, S.P. 1999. “The Lonely Superpower.” *Foreign Affairs*, March/April, 35-49.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8.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Developments, Prospects, and Key Policy Issues*. Washington D.C.
- Kristof, N.D. 1999. “World Markets, None of Them as Island.” *New York Times*, February 17.
- Krugman, P. 1998a. “What happened to Asia?”, *mimeo* <http://web.mit.edu/krugman/www/DISINTER.html>.
- _____ 1998b. “Saving Asia: It’s Time to Get Radical.”

Fortune, September 9.

-
1999. *The Return of Depression Economics*. Norton & Co. New York.
- North, D. 1998. "Institutional and Economic Change." *mimeo*, Washington University.
- Radelet, S. and Sachs, J. 1998. "The Onset of the East Asian Crisis." *mimeo*, Havar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http://www.hiid.harvard.edu/pub/other/easonet.pdf>.
- Rubin, R. 1998. Address on the Asian Financial Situation to Georgetown University, January 21, <http://www.treas.gov/press/releases/pr2158.htm>.
- Stokes, B. 1998. "A Geoeconomic Strategy for 21st Century." *Trade Strategy for a New Era: Ensuring U.S. Leadership in a Global Economy*."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New York.
- Suh, D.C. 1995. "The Role of South Korea and ASEAN in APEC." *ASEAN and Korea: Emerging Issues in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Singh, D. and Siregar, R.Y. eds.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Singapore, 149-166.
- U.S. House of Representatives. 1997. *East Asian Economic Conditions, Part 1*. Committee on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November 13, downloaded on the Internet.
- Warr, P.G. 1998. "Case Studies: The Troubled Economies, Thailand." *East Asia in Crisis: From Being a Miracle to Needing One?* McLeod, R.H. and Garnaut, R. eds. Routledge, London.
- World Bank. 1999. *World Development Report*. Washington D.C.
- World Trade Organization. 1999. "World Trade Growth Slower in 1998 After Unusually Strong Growth in 1997." April 16, Press Release, downloaded on the Internet.